

전북, 제21대 대선 투표율 82.5%

역대 최고치 경신 순창, 86.5%로 1위 전 지역 80% 돌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 지역 유권자들의 열띤 참여가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8시 기준, 전북의 최종 투표율이 8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151만908명 중 124만 6,1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

는 2017년 제19대 대선의 79.0%, 2022년 제20대 대선의 80.6%를 뛰어 넘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날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도 전북은 53.01%를 기록해, 전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사전투표제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북 15개 선거구 모두가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순창군이 86.5%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진안군이 84.4%, 장수군 84.0%, 임실군 83.8%, 전주시 덕진구 83.6%, 고창군과 완주군이 각각 83.5%, 무주군 83.2%, 남원시

83.1%, 전주시 완산구 82.7%, 김제시 82.1%, 정읍시 81.9%, 부안군 81.7%, 익산시 81.4%로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80.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고른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 전역이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셈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마저 80%를 넘겼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짐작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높은 투표율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정국 상황

에 대한 민심의 반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가적 혼란, 4.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한 상황이 유권자들의 '심판의 표시'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투표의 혁명'을 만들어낸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는 그 상징적 사례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만호 기자



분주한 대선 개표소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전주화산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대선 전국 투표율 79.4% 높아진 정치 참여, 지역별 온도차 뚜렷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79.4%로 집계되며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8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524만4,1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제19대 대선(77.2%)과 2022년 제20대 대선(77.1%)의 최종 투표율을 모두 웃도는 결과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확연히 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날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4.74%가 투표소를 찾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종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으나, 결과적으로는 0.6%포인트 차이로 해당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권자 중 거의 80%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정치적 관심이 높은

호남·서울 80% 훌쩍 넘겨 제주·충청권은 상대적 저조

지역에서 두드러진 투표율을 보였다. 광주광역시 83.9%로 가장 높았고, 전남(83.6%), 세종(83.1%), 전북(8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호남 지역의 경우 사전투표 단계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56.5%, 전북은 53.01%, 광주는 52.1%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이는 최종 투표율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처럼 호남 유권자들의 일관된 정치 참여 성향은 지역 정체성과 정치 의식의 강한 결합을 반영한다. 수도권에서도 투표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서울은 80.1%로 처음으로 80%대를 기록했으며, 경기도는 79.4%, 인천은 77.7%를 나타냈다. 수도권에서 80%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긴 결과는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던 대구(80.2%)와 울산(80.1%)도 80%를 넘기며 지역별 정치 참여 양상

이 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74.0%에 그쳤다. 충청남도(76.0%)와 충청북도(77.3%)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사전투표율도 낮았던 만큼 전반적인 정치적 관심이나 선거 동원이 다소 약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와 충청권의 상대적 저조한 참여는 향후 지역 정치와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가 사실상 전체 투표율 상승을 이끌어낸 결정적 변수였다. 총 1,571만여 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는 본투표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유권자들의 투표 방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제 사전투표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본투표에 준하는 영향력을 지닌 투표 경로로 자리잡은 셈이다. 지역별로 80%를 넘긴 지역들은 대체로 높은 사전투표율, 뚜렷한 지지 성향, 정치적 동원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이

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권자 참여율이 단순히 지역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 인프라, 후보자 경쟁력, 지역 현안과의 연관성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제21대 대선은 정당과 후보 중심의 경쟁을 넘어 유권자의 손으로 만들어낸 선거였다. 고른 연령대,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난 높은 참여율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12·3 비상계엄 발령과 4·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사건의 후속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적 심판이 투표에 반영된 선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높은 투표율은 그만큼 이번 대선이 유권자들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과 책임을 묻는 역사적 판단의 무대임을 보여준다. /이만호 기자

'먹거리 정책, 이제 도민이 직접 만듭니다'

도, '먹거리 속의기구' 참가자 공개 모집... 1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참여를 통한 먹거리 정책 수립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먹거리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 먹거리 속의기구'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 먹거리 속의기구'는 행정 주도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드는 전국 유일의 상설형 먹거리 정책 기구다. 다양한 지역 의견과 현장 실정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자격은 17세 이상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전북먹거리통합지

원 센터 누리집 (<http://211.199.189.156/food/agree>)에 접속해 신청 후, 먹거리정책에 관한 도민 설문조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 연립, 직업,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총 60여 명의 도민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도민들은 6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5회의 활동(사전 교육, 전체회의 2회, 워크숍 2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주제별로 심층 토론한 뒤 정책 제안서를 공동 작성해 공식 회의체에 제출하게 된다. 이 제안서는 전북자치도의 공식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가 심의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완주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퇴비제조시설 등 5곳, 강도 높은 개선 조치 도입 악취로 고통받아 온 비봉면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완주군 비봉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선 조치에 나섰다. 도는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만 3,093㎡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퇴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가 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지역 지정을 권고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구 회색배수 기준은 기존 500배에서 300배로, 부지 경계 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각각 강화된다. 비봉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1건의 악취 민원인 접수된 지역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 기간 악취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정 대상 사업장에는 방지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를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해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전북자치도의 악취 관리지역은 기존 익산, 완주, 진안 등 5곳에서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송금현 환경성립국장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완주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여름철 방제 대책본부 본격 가동

전북자치도, 6-8월 도내 14개 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 등 외래병해충 집중관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로 확산 중인 산림병해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6월부터 8월까지 14개 시군 산림부서와 함께 '산림병해충 예방·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본부는 여름철 집중 발생하는 외래병해충과 돌발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마련됐다. △방제사업의 현장 기술지원 △주요 대상 예방·방제 등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방제대책의 핵심은 농림지에 동시에 피해를 입히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공동대응이다. 특히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등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산림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농업부서와 협업체 행정 경계를 넘어서서 통합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북자치도 내에서는 이들 해충으로 총 2,61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러한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올해 4월부터 선제적 예방활동에 돌입했으며, 병해충 발견 즉시 알람이

및 유충 제거, 수간주사, 포획트랩 설치 등 적기 방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시군별 병해충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 52명을 전진 배치했다. 이들은 소나무재선충병뿐 아니라 각종 외래병해충까지 관찰하며 현장 밀착형 예찰·방제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TP, 분야별 총 60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민간 투자 중심의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분야별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중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를 두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TIPS 프로그램 도전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총 6개 TIPS 운영사와 협력해 약 60개사를 선발하고, 맞춤형 보육 및 투자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방산, 콘텐츠/ICT, 공공기술, 기후테크, 바이오헬스, 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 특화된 TIPS 운영사가 참여한다. 참여 운영사는 △로우파트너스(방산), △스크립톤(콘텐츠/ICT), △(주)B기술지주(공공기술), △인포뱅크(기후테크), △(유)스케일업파트너스(바이오/헬스케어), △(주)와이소설컴퍼니(순환경제) 등이다. 운영사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 맞춘 성장 프로그램 및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투자 유치 연계, 데모데이 개최, 직접투자, TIPS 및 답테크

TIPS 추천,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전방위로 돕는다. 사업 신청은 6월 중 각 운영사별 별도 접수로 진행되며, 중복 지원은 불허한다. 접수 방법과 일정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각 운영사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각 분야의 전문 운영사, 투자기관, 연구개발 지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 2025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190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주채권 확충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 190명(개인 153명, 법인 37명)을 '2025년 지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인공수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으로 납부한 자 중 시장·군수 추천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만호 기자